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1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설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 의혹과 관련, 중진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원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가 라운지

김효석 의원 IPU총회 참석 출국



○…민주당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은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국회 대표단장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3일 출국한다. 오는 5~10일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단장인 김 의원 이외에 한나라당 진영,

박영아 의원,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등 4명이 국회를 대표해 참석한다.

야당의원이 국회 공식대표단의 단장을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17대 국회에서 제1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총회에서 '위기 시대의 평화와 민주주의 증진 및 개발 촉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사회·안보·환경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순 최고 농협개혁안 심도 논의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이 농협개혁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설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신경(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추진 방

안이 확정되면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박 최고위원은 기존 농협개혁법안에 이번에 나온 신경분리 방침을 포함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농협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도시공사 변호인 사임

○…광주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의 변론을 맡아 물의(본보 1월자 5면 보도)를 빚은 변호사 출신 광주시의회 이철원 의원이 변호인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1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등산개발 협약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도시공사측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를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시 산하기관을 변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부 타당성이 있어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수입료도 돌려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의회 오늘 임시회

○…광주시 동구의회(의장 고수웅)는 2일부터 8일 까지 7일간 제174회 임시회를 연다. 동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을 심사, 의결한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사정정국·추경안 등 곳곳 지뢰밭

■ 4월 임시국회 개회…여야 격돌 예고

'박연차 리스트' 특검·국조 대립
'2월 국회 미처리' 23개 법안 통과

4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됐지만 추 가경정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를 '경제 살리기' 국회로 규정하고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개혁' 법안과 추경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을 재조정하고 '공안탄압' 분쇄에 나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예산 28조9천억 원 중 4대 강 정비사업 예산을 줄이고 부자 감세를 유예하면 13조8

천억원만 확보해도 국채를 최소화하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4대 강 정비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며 절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야당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박연차 리스트'를 둘러싼 민주당의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특검과 국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으며, 한미FTA비준동의안과 비정 규칙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설회의에서 "대통령이 G20정상회의 출국 전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제 4월은 희망을 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따질 것은 따져나갈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후퇴, 언론장악 음모 등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절자히 파헤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책임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 23개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디

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미디어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14건이다.

이중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불법 복제·전송자 규제를 강화했다.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국회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 이재고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를 뛰어 재석의원 245명 중에서 찬성 165표, 반대 78표, 기권·무효 각각 1표로 가결했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0만달러 종착지는 어디?

檢, "盧 조카사위 수수"…용처 규명 주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아 일부를 실제 사업에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인사에 따르면 연씨는 2008년 1월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라는 해외 창업투자회사를 세우기 직전인 2007년 12월 박 회장에게 투자를 요청해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미국 계좌가 아닌 홍콩에 개설된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연씨가 박 회장과 친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주고받을 만큼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밀접한 사이는 아니어서 500만 달러의 최종 종착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회장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어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처를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 씨 측이 밝힌 돈의 목적과 용도 등이 정치권 및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돈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연 씨 측이 500만 달러 수수사실에 대해 시인한 만큼 홍콩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연 씨 계좌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연 씨가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어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대검, 정치인 10여명 후원금 조사

김무성·허태열·권경석 의원 포함

다음주 단체장·공직자 잇단 소환

고위원·중진 연설회의에서 겹칠수사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김 의원은 "4선 의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후원회를 연 적이 있는데 왜 겹찰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의 후원금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후원금 내역을 요구한 것은 저에 대한 상처 입히기"라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허 의원도 연루설에 대해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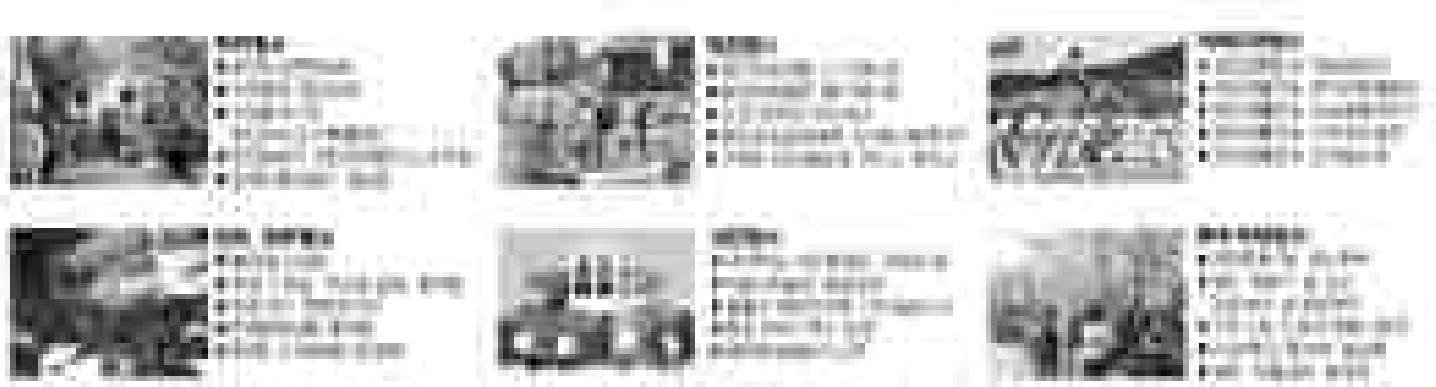
허 의원은 "수사 초기에 박연차 씨가 저한테 후원금으로 얼마를 주었다고 진술해서 신문에 보도됐는데 이미 특이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서 당당하게 저를 불러서 혜명을 듣든지 를 리어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씨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붙은 이래로 박 씨를 포함해 그쪽 사람들은 만난 일도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009 영암 왕인문화축제

Yeongnam Wangin Culture Festival 2009

2009. 4. 4(토)~7(화) / 전라남도 영암군 패만역사유적지



영암군